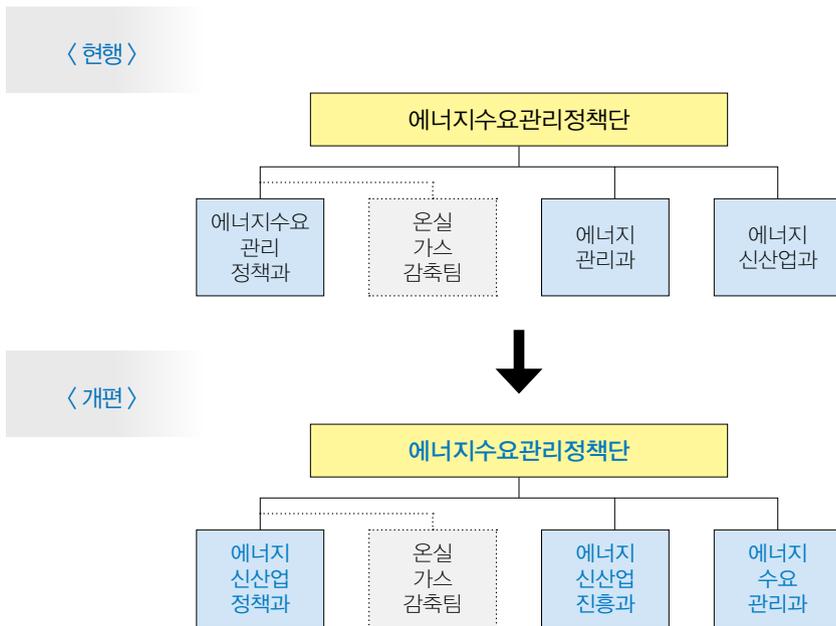


#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신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에너지신산업정책단」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을 에너지신산업정책단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난달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스트-2020(이하 Post-2020)’ 등 신(新) 기후체계에 대응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을 「에너지신산업정책단」으로 개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작년에 에너지신산업과(2014. 10. 23)를 신설한 바 있으나, ‘Post-2020’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 신시장을 창출하는 에너지신산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局)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존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의 인원과 조직을 재편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출범시켰다.

이번에 설립되는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은 우선, 2030년 에너지 신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을 담은 「에너지신산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 작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에너지 신산업에 특화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중장기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의 8대 에너지 신산업 모델 육성과 병행하여 국가 열지도 활용사업, 그린히트 프로젝트, 액화천연가스(이하LNG) 냉열 활용사업 등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 모델 발굴도 추진한다.

| 에너지 신산업 모델 후보(예시) |

사업	세부 내용
국가 열지도 (heat map)활용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리정보시스템에 열공급과 해당 자원의 활용처를 중심으로 온도, 에너지량 등을 표시 ⇒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다양한 신사업 모델 창출</li> <li>* (예시) 제철소 및 석유화학의 부생가스 정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li> </ul>
그린히트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외곽 발전소, 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미활용 열에너지를 타 산업에 연계 ⇒ 광역간 열배관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저렴하게 난방열 공급</li> </ul>
LNG 냉열 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NG 기화 과정에서 버려졌던 냉열을 냉동보관, 식품가공, 저온 물류 등으로 활용 (인천, 평택 등 LNG 기지 인근) ⇒ 전기료 운영비 절감, 냉동창고 난립 방지, 물류비 절감</li> </ul>

에너지 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 설립, 에너지 신산업 관련 공적개발 원조(ODA) 사업규모 확대, 국내 에너지 신산업 모델의 개도국 및 국제기구 홍보, 녹색기후기금(GCF)/아시아인프라투자 은행(AIB)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로,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은 '에너지에서 찾은 미래,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표어(슬로건)과 상징(로고)를 확정하고 앞으로 에너지 신산업 홍보물 등에 사용중이다.

표어(슬로건)	상징(로고)
<p><b>‘에너지에서 찾은 미래, 에너지 신산업’</b></p>	 <p>→ 에너지가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향(New)을 형상화 한 이미지</p>

이번에 출범하는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은 오는 2018년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에너지 신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로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산업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일부 조직 개편과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보강의 내용도 포함된다.

지난달 29일 범부처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에 따라 부처별로 제·개정하는 국가표준의 중복성 및 일관성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표준조정과를 신설하고, 기존 표준 행정을 담당하는 4개과를 3개과로 통합하는 등 표준정책국 조직을 일부 개편했다.

아울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어린이 제품의 안전관리 및 불법제품의 유통차단,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강화를 위해 정원을 7명 증원했다. 